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0년 3월 2차 (2020.3.16~3.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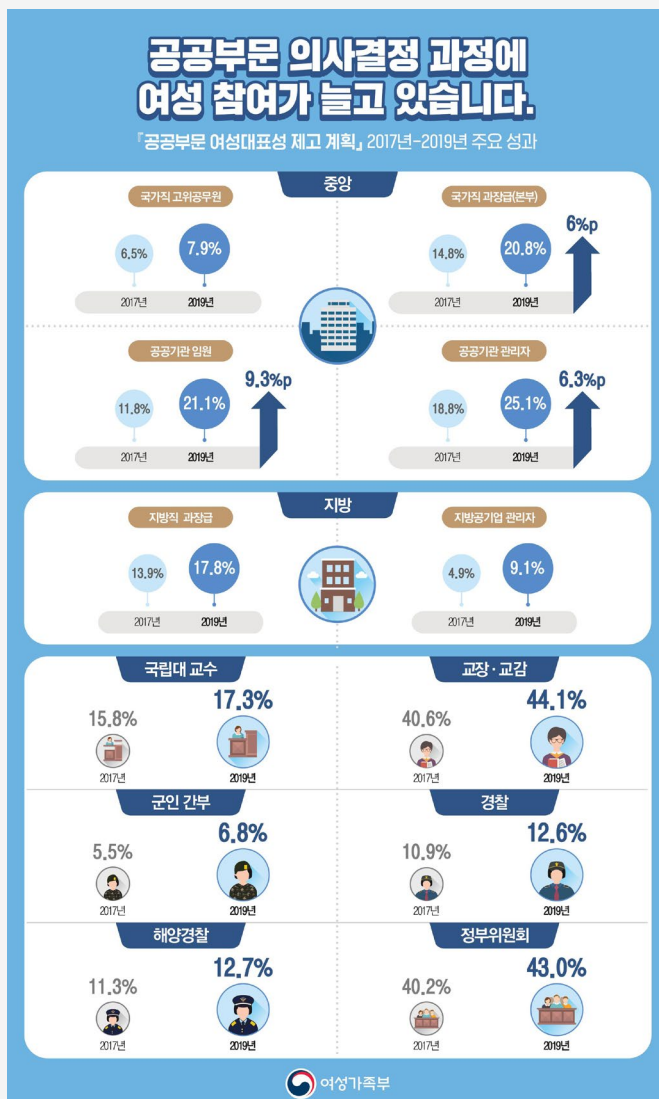


2019년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2개 전 분야 목표 달성

- ☑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18~'22) 계획을 수립('17.11)한 이후 중간점검 결과, 2017년 대비 12개 모든 분야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하였다고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23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처벌 강화

- ☑ 법무부는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6. 25.부터 시행 예정)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3.17.]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lxNDE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Q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IMQl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QQl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발생

- ☑ 여성가족부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함
 -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짐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18]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6925

2019년 혼인건수는 전년대비 7.2%p 감소, 이혼건수는 전년대비 2.0%p 증가

- ☑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혼인건수의 경우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전년대비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의 경우 남자는 30대 초반이 51.1건, 여자는 20대 후반이 50.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03.1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120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증가

☑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장 : 차관)를 개최해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과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

-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는 4배, 이행금액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행건수 : ('15) 514건 → ('17) 1,018건 → ('19) 1,993건
 - 이행금액 : ('15) 25억 원 → ('17) 142억 원 → ('19) 262억 원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0

'n번방 사건' 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 강화방안 논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4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

☑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설명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4.]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5 bbtSn=706934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법무부는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을 대검에 지시하고, 처벌 강화 법 개정 등을 추진 예정

-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여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②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 ③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④ 국회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함

참고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0.03.24.]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lxNjQ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OQI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MOQIMjZpc1ZpZXNaW5JTNEZmFsc2UIMjZwYWdlJTNEZmJic09wZW5XcmRTZXElMOQIMjZzcmNoQ29sdW1uJTNEJTl2c3JjaFdyZCUzRCUyNg%3D%3D>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 ☑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화)부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다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3.2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17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폭력 피해) 지난 1년 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10.3%(2016년 12.1%), 남성은 6.2%(2016년 8.6%)로 나타남
- (신고 인식)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88.3%로 가정폭력 신고 인식이 높게 나타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3.2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936

200만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으며(1조539억 원),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3.27.]
http://www.mohw.go.kr/react/al/sa1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767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젠더 폭력· 안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안 제284조제2항 신설, 제285조제1항, 제324조제3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해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 방지(안 제44조의7 및 제70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8인)	2020-03-23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도,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보다 엄중히 처벌(안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2020-03-25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 제고하고 및 범죄 근절 기여(안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2020-03-25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그 촬영자 또는 반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3 신설 등)
여성 건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2020-03-24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수준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74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보도자료 배포

여성 당직자, 남성중심 성차별적 정당 문화로 정치세력화에 한계 부서배치 차별, 여성정책업무 주변화, 네트워크 소외 등 어려움 겪고 있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조직문화 인식 등을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여성 당직자 5명 중 2명은 정당 내 부서배치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당들은 여성정책 업무를 ‘여성만의 일’로 인식하는 등 정당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참고자료

- <https://www.kwdi.re.kr/plaza/bodoView.do?p=1&idx=125476>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여성 당직자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정당 내의 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03.16	경향신문	5개 정당 여성 당직자 40% "부서배치 차별 경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62209005&code=940702
	03.17	여성신문	5개 정당 여성 당직자 40% "성차별 경험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186
[제119차 양성평등정책포럼] 포용, 공정과 젠더를 말하다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	03.23.	문화일보	女, '사적 영역'불공정 피부로 체감... 男, '공적 제도'에서 역차별 불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301031442000002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03.23.	노컷뉴스	심바 자와디, n번방 사건에 '냉정한 처벌' 필요성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373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03.26.	아시아경제	"제대로 짚값 치러야"...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 제도화 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32612014090341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수탁과제)	03.26	정책브리핑	10명 중 9명, 가정폭력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16&call_from=naver_news
	03.26	연합뉴스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 27%, 임신 중에도 피해"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134500005?input=1195m
	03.26	이투데이	"결혼 5년 후 가정폭력 증가...국민 10명 중 9명 적극 신고"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649
	03.26	쿠키뉴스	배우자 폭행 이유 1위 '나를 무시해서 말을 안들어서'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67992
	03.26	BBS	"함께 재산관리하면 가정 폭력 피해 낮아"...여가부, '2019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924
	03.26	연합뉴스	"공동 재산관리하는 부부가 가정폭력 피해경험 낮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80800005?input=1195m

2019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수탁과제)	03.26	세계일보	'재산 공동관리'부부, 가정폭력 발생률 최저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6518046?OutUrl=naver
	03.27	BBS	"공동재산관리, 가정 폭력 감소"...불교계, 중재자 역할 커져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044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03.25	매일경제	`n번방 와치맨` 숨방랑이 구형...보완책은?	윤덕경 연구위원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309154/
03.26	서울신문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 제도와 필요"	김정혜 부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7010029&wlog_tag3=naver

유관기관 연구동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7가지 방문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감염병 관련 안전 규정, 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대응과 지침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 제언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20.03.27.]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82&ano=1

코로나19와 성인지적 관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

참고자료

- [경기] Wifi 2020.03.23.]
<https://gfwri.kr/portfolio-items/wifi-204/?portfolioCats=15>

코로나19 속 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휴원과 휴교가 장기화되고 있음. 이에 따른 가정 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돌봄 지원정책을 살펴봄.

참고자료

- [경기] Wifi 2020.03.30.]
<https://gfwri.kr/portfolio-items/wifi-204/?portfolioCats=15>